

## 베네수엘라의 파멸이 한국에 주는 경고

김충남(대통령 전문가)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일 뿐 아니라 3류 국가에 불과하여 대다수 우리 국민은 그 나라가 어디 있으며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베네수엘라는 오래 전부터 좌파 지식인들에게 한국이 본받아야 할 대안모델로 인식돼왔다. 차베스 노선으로 베네수엘라는 파멸상태인데 문재인 정부가 차베스와 비슷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없지 않다. 차베스를 숭상했던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차베스 노선이 왜 그 같은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게 됐는지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문 대통령이 차베스처럼 과감한 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차베스 시대의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왜 실패했는지 광범위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 본 후 노무현 정부 당시 왜 ‘차베스 붐’이 일어났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 어떤 점에서 차베스 노선과 유사하며 그것이 왜 위험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 차베스의 무모한 체제 개혁: 볼리바르(Bolivar)혁명

#### 차베스 등장의 배경

베네수엘라는 한 때 1인당 소득 세계 4위를 자랑했을 정도로 풍요와 희망의 땅이었지만 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10여 년 만에 절망의 나라로 곤두박질쳤다. 비현실적인 이념을 가진 잘못된 지도자가 나라를 망친다는 생생한 증거다.

인구는 3,000만에 불과하지만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과 세계 4위의 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기타 광물 매장량도 엄청난 자원부국이며, 특히 세계 5~6위 석유 수출국이다.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미인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남미 모범국가였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것은 물론,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쿠데타가 빈발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안정된 민주를 구가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래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 등급이 최상급(AAA)이었고, 중남미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 정도였다. 고가의 스포츠카 수입이 유행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 마이애미까지 쇼핑을 갔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부를 누리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등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유가가 높을 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여 흥청망청했다. 그런데 1980년 전후 배럴 당 35달러이던 유가가 80년대 중반 10달러 내외로 폭락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1989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1997년 IMF가 한국에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긴축재정, 사회복지 축소, 국영기업 민영화, 남미지역 무역자유화 수용 등, 신자유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복지가 축소되고, 외화 부족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수도 카라카스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하여 수천 명이 희생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육군 중령 우고 차베스(Hugo Chavez)는 군내 지하조직 ‘볼리바르운동(MBR-200)’을 중심으로 1992년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2년 간 감옥살이를 했다. 사면으로 풀려난 그는 ‘제5공화국운동’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정치활동에 나섰다.

1998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차베스는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민중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 체제가 다수 국민을 빈민층으로 전락시켰다며 그 책임이 기성 정치인과 기업인 등 기존 엘리트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1999년 2월 취임했다.

### 구(舊)체제 해체와 ‘제5공화국’ 건설

차베스는 자본주의를 저주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반미주의자였다. 그는 “자본주의는 우리를 지옥으로 직행하게 한다.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길은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야말로 베네수엘라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불평등과 고난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와 쿠바의 카스트로를 존경해왔다. 그래서 차베스의 사상은 반미(反美) 민족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혼합이었다. 그는 대내적으로 자본가들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고, 대외적으로 미국 등 자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표라면서 자신의 노선을 ‘21세기 사회주의’라 했다.

취임 직후 그는 군대의 동료들과 이념적 동지들을 정부 요직에 포진시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한다며 제헌의회 소집 등 위헌적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체제 변혁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는 반대세력을 비난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투옥하는 등, 적폐청산 캠페인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취임 두 달 만인 4월, 제헌의회 의원 선거 실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켰고, 7월에 실시된 제헌의회 의원 선거에서 집권연합세력은 전체 131석 중 95%인 120석을 차지했다.

제헌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차베스는 기득권세력의 일부인 기존 의회와 대법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에 따라 제헌의회는 8월부터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정

지작업으로 ‘초법적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기존 정부기구를 폐지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추구해온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제헌의회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행세했지만, 사실은 차베스의 거수기에 불과했다. 제헌의회는 8월 19일 ‘사법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판사 해고권과 법원 조사권을 제헌의회에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법관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공포 분위기에 위축된 대법관들은 8:6으로 제헌의회가 합법이라 판결했고, 이에 대법원장은 “법원은 죽었다”면서 사임했다. 곧 이어 제헌의회는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190여 명의 판사들을 부패혐의 등으로 제거했다. 2004년에는 대법원 판사의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가시킨 후 친(親)차베스 인사들을 대거 앉히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또한 제헌의회는 8월 25일 ‘입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법안 심의·의결권 등 의회의 고유 권한을 제헌의회 권한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기존 의회도 무력화됐다. 제헌의회가 마련한 헌법안이 12월 국민투표로 확정하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대다수 제헌의회 의원이 차베스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을 만들었다.

새 헌법은 국가의 명칭부터 ‘베네수엘라 공화국’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바꾸었다.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늘리고 연임 가능토록 했고, 또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 입법권, 언론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강화했다. 양원제였던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었고, 참여 민주주의 구호 아래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했다. 중앙정부의 권력도 5권(權)으로 바꾸었다.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선거부와 시민부가 추가됐다. 선거부는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고, 시민부는 ‘특별검찰 기관’이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하여 언론 통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새 헌법에는 기존 정당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 예를 들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폐지 등이 포함됐다. 여성 권리도 대폭 확대됐다. 여성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했고, 가정주부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새 헌법은 또한 국민투표를 통한 ‘입법 요구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함으로써 국민 지지를 빙자한 독재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로서 차베스는 쿠바의 카스트로처럼 1인 장기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2000년 대선에서 차베스는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세력이 압승했다. 그 해 11월, 의회는 대통령이 1년간 대통령령(令)만으로 신속한 개혁정책을 가능케 하는 ‘수권법(授權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차베스는 1년 동안 49개의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자신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든 밀어붙였다. 이처럼 차베스는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새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체제를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체제 변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차베스는 언론이 부패한 기득권세력을 대변해왔다고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2007년에 시작된 집권 3기부터 그는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했고 "공중의

불안을 조성"하는 보도는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방송에서 차베스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됐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웹사이트는 송출 중단 또는 폐쇄 조치됐다. 차베스 정부는 비판적인 방송국을 강제로 국유화하거나 허가권을 갱신하지 않는 등의 조치로 언론을 탄압하는 동시에 관영 방송국은 대폭 증가했다. 집권 초기 관영 방송국은 TV방송국 1곳과 라디오 방송국 2곳뿐이었지만, 2007년에는 관영 TV방송국 4곳, 라디오 방송국 7곳으로 늘어났다.

그는 타고난 선동가였다. 반대세력에 대한 그의 분노는 중요한 정치적 무기였다. 그는 기득권층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특히 야당 지도자에 대해 '네오 나치', '양키', '파시스트'라 지칭하며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없는 부패한 엘리트'로 낙인찍는 동시에 자신과 그의 동지들을 민중을 구하는 투사로 미화했다. 그는 '안녕 대통령'이라는 국정홍보 TV프로그램에 수시로 출연하여 카리스마 넘치고(부정적으로 본다면 성격이 괘괄하고 독선적인) 유머러스한(역시 부정적으로 본다면 막말과 저질발언이나 해대는) 언변으로 친근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데 성공했다.

2006년 말 3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사회주의의 혁명적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코뮌(commune)국가'를 제안했다. '코뮌국가'는 기존 행정조직과 별개로 "지역평의회(commune)"와 "마을평의회(community council)"를 설치하여 주민이 지역정치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지원으로 전국에 마을평의회가 설치 운영됐으며, 마을평의회는 지역평의회에 통합되었다. 2010년 당시 마을평의회는 3만개에 달했다. 지역평의회가 사회주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로부터 승인 받지 못했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지역평의회와 마을평의회를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했기 때문에 지역평의회와 마을평의회는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차베스 정권을 지지하는 대중조직망으로 전략했다.

차베스는 국제적으로는 중남미 좌파연대(連帶) 구축에 앞장섰다. 쿠바의 카스트로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의를 강화했고, 쿠바에 석유를 헐값으로 제공하는 대신 수만 명의 의사와 교사들을 데려와 빈민지역의 보건소와 교육기관에 투입했다. '반미 동맹'을 결성한다며 모랄레스가 이끄는 볼리비아에도 석유와 재정지원을 했고, 니카라과, 콜롬비아 등 중남미 반미 국가들에게 석유를 반값에 제공했다. 2006년 9월 그는 유엔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악마, 제국주의자, 파시스트, 살인자 등으로 맹비난했다.

### 친노동·반기업적 사회주의 경제정책

차베스는 미국, 자본주의, 대기업을 3대 적이라며 경제난의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쿠바의 반미 공산독재자 카스트로를 아버지처럼 섬기며,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로 알려진 미국식 자본주의체제와 세계화에 반대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그는 대기업을 민중을 착취하는 악(惡)한 존재라며, 에너지, 전력, 통신, 철강, 식품, 금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는데 대부분은 IMF 구

제금융의 조건으로 민영화됐던 회사들이다. 또한 그는 코노코 필립스(Conoco Phillips) 등 다국적 석유기업은 물론 카길(Cargill) 같은 미국계 농업·식품회사까지도 국유화했고, 심지어 민간 슈퍼마켓까지 몰수하여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다.

차베스의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국가사회주의 정책이었다. 그는 민중에게 경제 권력을 나누어준다는 ‘경제 민주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도 자력갱생을 추구했다. ‘자본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한다면서 국유화한 기업들의 기존 관리자와 기술자들을 퇴출시키고 노동자단체가 경영하게 하거나, 다국적 기업이 소유했던 식품회사와 영농회사를 몰수하여 노동자위원회 또는 농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 했다. 또한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형 기업 설립을 적극 장려하여 2009년의 협동조합형 기업은 무려 26만개에 달했다.

토지와 주택에도 공(公)개념을 도입하여 유휴 토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거나 몰수한 뒤 빈민들에게 나눠주었고, 남의 땅을 불법 점유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들은 또한 식량주권을 확보하한다면서 다국적 기업이나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500만 에이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농사를 짓도록 했다. 그러나 땅을 무료로 받은 농민들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아 식량생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차베스는 기업은 착취의 근원이고 기업인은 착취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은 얼어붙었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경험과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경영부실이 불가피했다. 다국적 기업들도 자산이 몰수당하거나 강제로 팔아야 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물론 다수의 기업인과 기술자들이 국외로 탈출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다. 차베스 취임 이래 7년 간 베네수엘라 산업체의 40%가 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베네수엘라국영석유공사(PDVSA)가 오랫동안 기득권세력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판단한 차베스는 이 공사의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반발하여 석유산업 종사자들이 총파업에 나서자 차베스는 석유공사 직원의 40%에 달하는 임직원 18,000명을 해고했고, 특히 연구개발부서(Intervep) 인력의 80%를 해고했을 뿐 아니라 석유 관련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고당한 석유산업 경영관리자, 연구개발전문가, 숙련노동자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에 30%나 줄어들었다. 또한 연안 석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지 않았고, 다국적 석유기업들도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는 것을 외면했다.

방대한 자본과 100만 가까운 인력이 해외로 도피하고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여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차베스 정부는 설탕, 식용유 같은 생필품 가격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많은 업체들이 생산 활동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물자부족을 초래했고, 농산물 가격 통제로 영농회사와 농민들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서 식료품 부족도 심각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식품과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정부는 외

화 부족으로 필요한 물자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정부의 외환거래 통제로 업자들도 필요한 물자 수입에 소극적이었다. 심각한 물자부족으로 차베스 집권 10년 만에 수도 카라카스의 식품가격이 9배나 뛰어 오르는 등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못살겠다며 시위에 나섰다.

### 지속 불가능했던 복지정책: 볼리바르 미션(Bolivarian Missions)

차베스 노선의 핵심은 포괄적 복지정책이다. 차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고, 자신의 체제개혁을 적극 지지해준 민중들의 지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 혜택과 분배정책으로 보답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석유산업 국유화 등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을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빈민층 대상 식료품 보조금 지급, 각종 연금제도 도입 등에 쏟아 부었다. 이 같은 복지사업들을 통틀어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볼리바르 미션’ 또는 ‘볼리바르 사업’이라 했고, 세부 프로그램의 명칭도 위인들의 이름을 붙였다. 무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 사업, 빈민층 대상 무료 의료사업, 저소득층 대상 무료 안과 수술 사업, 문맹퇴치 사업, 고등학교 중퇴자 대상 대안학교 사업, 서민층 대상 대학교육 지원 사업, 토지개혁과 주택공급 사업, 협동조합 기업 설립 및 운영 사업, 저소득층 대상 토지분배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16,600개의 공공 슈퍼마켓을 설치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했고, 6000개의 ‘무료 식당(soup kitchen)’도 설치하여 음식도 제공했다. 그러나 수요공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식품과 생필품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다수의 식료품 생산업체와 제조업들이 파산하여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이 나타나 생필품을 상점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각종 교육을 확대하면서 교사 숫자를 6만5000만에서 35만으로 6배 정도 증원했다. 또한 임대주택 300만 채를 건설하여 극빈층에는 무상, 서민층에는 헐값으로 제공했다. 그렇지만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부채는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2,000억 달러가 넘기도 했다.

차베스는 국민총생산(GDP)의 41%, 정부 세입의 60%를 복지에 쏟아 부었으며, 14년의 그의 재임 기간에 1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 결과 그의 집권 기간 중 실업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1인당 소득은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빈곤율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교육, 일자리, 주거시설, 생활환경 등이 질적인 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이 여전했다. 또한 복지정책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집권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선거나 국민투표가 끝나면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II. 국가파멸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

### 무능한 후계자 마두로

차베스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산업기반이 와해되면서 2010년부터 감당 못할 물가 폭등과 생필품 부족에 직면했고, 그래서 그는 그 해 6월 ‘경제전쟁’을 선언한 후 설탕, 식용유, 휴지 같은 생필품 가격은 강력히 통제했다. 이 같은 물가억제정책은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많은 업체가 파산했다. 그 해의 인플레이션은 100%로서 세계 최고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못살겠다며 거리로 몰려나왔다. 이런 가운데 실시된 총선거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야당보다 겨우 1%를 더 얻었을 정도로 민심이반이 심각했다. 설상가상으로 차베스는 다음 해 6월 암이 발견되어 쿠바에서 4차례나 수술을 받으면서 국정을 돌보지도 못했다.

2013년 3월 차베스가 사망한 후 부통령이던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가 깊은 수렁에 빠진 나라를 이어받았다. 버스운전사 출신인 마두로는 차베스 같은 카리스마도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웅변술도 없었고, 오로지 차베스의 ‘유훈(遺訓)통치’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방만한 복지정책은 그 동안의 높은 유가(油價) 덕분에 가능했지만, 유가가 폭락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014년 초 배럴 당 130달러를 오르내리던 유가가 그 해 후반 절반으로 폭락했고, 다음 해에는 30달러 이하로 떨어져 생산원가에도 미달했다. 더구나 차베스 정권 하에서 석유생산도 급감했다. 차베스가 취임한 해인 1999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300만 배럴이었지만 2017년경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 동안 석유산업에 대한 시설 및 기술 투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원유 수출이 외화 수입의 96%, 정부 재정수입의 70~80% 정도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외화 수입과 재정 수입이 몽땅 날아가 버리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 2012년의 빈곤율이 25%였지만 2015년에는 73%로 치솟았다. 이 같은 여건에서 실시된 2015년 총선거에서 야당 연합은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유아 사망률은 30%, 산모 사망률은 65% 증가했다. 여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모유까지 팔고 단돈 7달러에 몸을 팔아야 했다. 카라카스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 119건으로 전쟁지역을 제외하면 살인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두로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악화는 미국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책임”이라는 차베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 방만한 복지정책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심각한 물자부족과 살인적인 물가폭등으로 복지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부터 축소(-4%)하기 시작하여 2015년 -6%, 2016년 -17%, 2017년 -16%, 2018년 -18% 등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고, 국민총생산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이 산정한 ‘고통지수(misery index)’에서 베네수엘라는 2013년부터 계속 세계 최고였다. 시장이 마비되고 정부 배급도 중단되어

배고픔이 일상화되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약탈과 폭동이 빈발했다. 아이들을 버리는 부모가 늘어났고 굶는 학생들이 속출했으며, 쓰레기장을 뒤져 먹을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2016년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는 159.7로 세계 최고였으며, 2위인 아르헨티나(39.9)의 4배나 되었다. 당시 한국의 고통지수는 5.5로 스위스와 함께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였다. 2017년 베네수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만 6,305%였고, 2018년에는 170만%나 되었다. IMF는 금년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을 무려 1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지옥이 따로 없다**

2009년 이래 10년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계속 악화돼왔다. 수많은 주민들이 날이면 날마다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해달라며 시위에 나섰고, 그들 중에는 식료품 수송 트럭과 국영 슈퍼마켓을 습격해 식료품을 탈취하기도 했다. 빈번한 정전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마비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상수도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물조차 구할 수 없었다. 차베스 정부가 퍼주기만 했을 뿐, 전기, 상수도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2018년 유엔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94%가 기본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분류했으며, 전체 가구의 절반이 식품과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특히 “국민의 24%인 700만명은 긴급 구호가 없으면 생존이 위태롭다”고 했다. 노인들은 18개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연금을 받았더라도 물가 폭등으로 식량을 살 수도 없다고 했고, 말라리아와 결핵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약품 부족으로 병원에 갈 수도 없다고 했다.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2017년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몸무게가 평균 11kg 줄었다고 한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탈출했으며, 20만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페인으로 몰려갔고 그중 상당수는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2015년 이래 약 530만 명이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17%이며, 그 중 130만이 영양실조 상태라 한다. 마두로는 최악의 위기에 도 아무런 수습책도 내놓지 못한 채 권력유지에 집착했다. 2018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마두로는 야당 지도자들을 가택 연금하거나 투옥하고 언론을 통제해 가운데 당선되어 2019년 초 취임했지만, 국내외에서 부정선거였다고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마두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하는 등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 **무책임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쳤다**

남미의 베네치아는 10여 년 만에 거지의 나라로 추락했다. 베네수엘라는 전쟁 없이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사회주의 독재로 몰락한 21세기 최악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



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와 국민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차베스가 국민을 빈곤에서 해방시켜주겠다며 분배에 치중했던 것은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기만에 불과했다.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의 몫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저유가 때문이지 차베스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항상 오르내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산유국 정부는 유가 폭락에 대비했어야 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차베스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온갖 복지정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경제발전에는 아무런 비전이 없었고 석유의존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차베스가 오일 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富)를 산업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해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고 낭비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동 산유국들이 오일 머니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공산주의는 철저한 실패로 끝난 시대에 차베스가 “사회주의가 유일한 길”이라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중국,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차베스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물론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면서 경제는 고사했다. 결코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었다. 석유의 4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석유개발에 미국의 기술과 자본에 크게 의존해왔던 상황에서 쿠바식 반미·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좌파 포퓰리즘에 동조한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문제였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가진 “부자의식” 때문에 시장경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위기가 닥친 순간에도 그들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확신하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경제개혁을 인정하기보다는 과거의 고유가 붐 시대를 다시 가져다줄 카리스마적 구원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가운데 차베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잘사는 쉬운 길이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외국의 한 베네수엘라 전문가는 차베스 시대를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차베스가 민중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며 구체제 청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했을 때 민중들은 무조건 지지했다. 그들은 나라가 잘못되고 자기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13번의 국민투표를 거치며 냄비는 너무 뜨거워져 개구리가 살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제를 해체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무능한 통치자의 허황된 꿈은 결국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 III. ‘차베스 붐’이 불었던 한국

차베스는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바 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차베스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차베스는 ‘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가 특권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고 국민 참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하며 자신의 정부를 ‘참여정부’라 했다.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적과 동지로 양

분하여 반대세력을 계속 적대시하며, 친노동·반기업정책과 복지확대정책을 펴고, 대외적으로 반미자주노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노무현과 차베스는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노무현은 16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사 청산’을 했던 것도 차베스와 유사하다. 2006년 2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노선을 노골화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어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포퓰리즘에서 차베스와 닮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1997~98년 IMF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가 요구한 긴축정책과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에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당시 좌파진영은 공산주의 붕괴 이후 뚜렷한 대안(代案)모델을 차지 못해 왔는데 차베스가 신자유주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슬러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참여 민주주의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예를 들면,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2004년 말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후 쓴 글에서 차베스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볼리바르 혁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러 면에서 노무현과 차베스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고 차베스를 높이 평가했다.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방침을 밝히자 노 대통령의 지지세력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2006년 6월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졸속체결 반대 시국선언에는 3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백낙청 등 50여명의 좌파 지식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들도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나섰을 때 강력히 반발했다. 7월6일 발표된 '경제학자 171명의 한미FTA 원점 재검토 촉구' 성명에는 강신욱(통계청장),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경제수석 및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쪽을 끌어안지 못하고 배제한다면 참여정부와 진보개혁세력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었던 장하성 교수도 그 해 8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좌파 지식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차베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베스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대신 진보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했다. 이 무렵 KBS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특집을 방송하며 차베스의 노선에서 한국이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겨레신문은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열풍’ 수준이라며, 한미FTA 협상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차베스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차베스를 찬양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고, 그를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민중을 해방시키고 있는 위대한 혁명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등 그를 찬양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국 사회의 개혁, 그리고 차베스’란 만화도 인기를 모았다.

한미FTA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더욱 가열됐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하고 비판하자, 노 대통령은 ‘유연한 진보’를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무렵 ‘한국사회포럼’이 한미FTA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조직위원장이던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여기서 차베스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자료를 상영했다. 한국사회포럼은 손호철, 김상곤, 조희연 등이 주도했으며, 참여연대, 교수노조, 민주노총 등 20여개 진보단체들이 참여했다. 김상곤은 2008년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시절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바 있다. 선진국 수준인 한국이 3류 사회주의 국가를 대안모델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앞선 나라들로부터 배우려 한 것이 아니라 한참 뒤쳐진 나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한 것이다.

좌파세력이 차베스에 대해 열광했던 것은 그의 반미노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2008년 봄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을 때 100일에 걸친 ‘광우병 시위’가 일어났던 것은 2007년의 두 여중생 사망 이래 팽배한 반미정서 때문이기도 했다.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성사시켰던 한미FTA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적극 반대했다. 2011년 11월22일 한미FTA 비준 당시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대표는 "안보 정국을 틈타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은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을사늑약과 한미FTA는 본질이 같다"고 비난했다. 한미FTA 체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우리 이익을 지켜낸 협상"이라 했던 문재인은 당시 한미FTA 비준을 반대했고,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에는 한미FTA에 대해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며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IV. 차베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의 명령이라며 급진적인 체제개혁과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베네수엘라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경제 교체, 시대 교체, 과거의 낡은 질서나 체제, 세력에 대한 역사 교체” 등 전면적 체제변혁을 주장했고, 대통령 취임사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후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다. 차베스의 구체제 해체 못지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광범한 체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차베스를 영웅시하는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차지한 가운데 이번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며 과감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노선이 차베스의 노선과 유사한 것이 적지 않다. 첫째, 차베스가 구체제를 해체하려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류교체를 표방하며 무리한 적폐청산을 해왔다. 차베스는 볼리바르혁명의 일환이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내세웠다. 차베스가 사법부를 무력화한 후 장악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사법농단’ 단죄 등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을 진보법조단체인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들로 임명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을 같은 코드 인사들로 채웠다. 차베스가 ‘시민부’라는 ‘특별검찰기구’를 만들었듯이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 상정했고, 차베스가 ‘선거부’를 장악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친정부 인사를 선관위 간부직에 앉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차베스 정권의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 했던 것은 차베스가 조직했던 지역평의회(commune)와 마을평의회(community council)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헌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개헌을 포함한 더욱 급진적인 체제개혁을 시도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방제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친노동·반기업적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차베스가 기업을 적으로 규정하고 기업인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반기업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착취와 피착취’의 대립구조로 인식하며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반대하며, ‘재벌해체’ 또는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인사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분배우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법인세 인상,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도 강행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도 강화되어 왔다.

셋째, 전면적인 복지확대도 비슷하다. 차베스는 급진적인 복지확대로 국가를 파탄에 빠뜨렸지만,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 아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공공주택 공급 등 온갖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보조금과 선심성 사업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해 세금이 25조원이나 더 걷혔음에도 국가부채가 127조원 증가하여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이르렀다.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복지 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넷째, 적과 동지로 편 가르기 하여 반대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도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반외세 민족주의 노선도 비슷하다. 공산권 몰락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음에도 차베스는 쿠바식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며 반미선동에 매달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를 중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all-in)하는 동시에 반일(反日)정서는 조장해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채택한 ‘남북 군사합의’는 국가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 건설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힌 아마추어들의 의욕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고 말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성급한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로 들린다.

‘차베스 냄비’의 개구리들은 차베스가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약속에 무조건 열광하다가 이제 너무 뜨거워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한국 냄비’ 속의 ‘개구리’들은 ‘설마’ 하다가 너무 뜨겁다고 느꼈을 때는 너무 늦었을 것이다. 차베스가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을 남발한지 10년도 못돼 나라를 궁지에 빠뜨리고 20년도 못돼 파멸에 빠뜨렸다는 사실조차 냉철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 한국의 내일은 지극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끝.